제20대 대선
군인권 10 대 공약
제안서

군인권센터

예비 국군통수권자에게 더 나은 군대를 위한 10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5년, 군의 인권 상황과 복무 여건이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군인권센터가 제안하였던 열 가지 공약은 변화이 씨앗으로 작용하였다 자부합니다.

달성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고, 정부가 현실을 넘지 못해 타협하고만 안타까운 순간도 많았지만 병사 월급 인상, 영창 제도 폐지, 병사 핸드폰 사용, 평일 외출, 여군 보직 제한 폐지 등 우리 군의 인권 상황을 진전시킨 정책적 성과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각 정당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렀던 2021년은 유독 군에서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같이 적이 아닌 아군에 의해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비극이 끝 갈 데 없이 이어졌습니다. 정치와 제도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많이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향후 5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잡는 대선이 목전에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국군 장병과 인권침해 피해자, 유가족의 목소리를 녹여낸 열 가지의 군인권 공약을 대선 후보자에게 제안합니다.

장병의 생명과 인권을 책임져야 할 예비 국군통수권자로서, 인권이 보장되는 더 나은 대한민국 국군을 만들기 위한 군인권 10대 공약을 모두 채택하여주시기를 희망하며 군인의 인권 옹호에 앞장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22. 1.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 태 훈**

군인권공약

1

아군(我軍)에 의한 죽음, 이제는 끝냅시다.

군대 내 '젠더폭력' 성희롱, 성폭력 문제 해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여군, 2021년에만 3명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군 성폭력은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강한 군에서 피해자를 극한의 고통으로 몰아넣을 뿐 아니라,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일 군에서 1건 이상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형사 통계 기준). 이제 아군에게 성적 괴롭힘을 당해 죽고 다치고, 군문을 떠나는 절망의 행렬을 멈춰야 합니다.

- 실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장관 직속 '군 성폭력 전담기구' 의 조속한 신설 및 체계화
- 훈령 상 '성희롱' 징계 처벌 기준 강화 및 음담패설, 3자에 대한 성적 담화 처벌 기준 마련
- 매년 군 성평등지수 및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연례보고를 통한 실태 공개

군인권공약

2

국군 장병의 통신료 부담을 경감시킵시다.

2만원대 군인요금제 출시 / 스마트폰 사용 여건 개선

간부, 병사, 군인 가족 모두 만족하는 병사 스마트폰 사용! 하지만 통신 3사에서 운영하는 군인요금제 가격은 너무 불합리합니다. 일과 이후에만 쓰는데 요금은 비슷한 조건의 일반요금제와 20%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부족한 데이터, 느린 속도, 잘 안 터지는 LTE까지. 소통, 여가, 휴식, 자기계발의 도구인 스마트폰, 나라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을 위해 업그레이드된 사용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군인 요금제		일반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월 100GB + 무제한 (기본 제공량 소진 후 5Mbps 속도제어)		
기본 음성, 문자	무제한		
월 요금	55,000 원	←20%차이→	69,000 원

〈통신 3사 군인 요금제 – 일반 요금제 비교〉

- 2만원대 군인 요금제 (데이터 무제한) 출시 추진
- 격오지 통신 여건 확보
- 스마트폰 24시간 휴대 정책 조기 추진

* 사용 통제(경계근무, 교육훈련, 비밀취급, 지휘통제실 근무 등)는 간부와 동일 기준 적용

군인권공약

3

군인은 '공짜 노동력'이 아닙니다.

대민지원,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 피해 복구·지원' 한정

지역 행사에 군인들이 동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시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명목하에 군인을 공짜 노동력 취급하며'대민지원'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규정상 정부, 지자체 심지어 사회단체나 개인이 주관하는 사업에도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구슬땀을 흘리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휴식도 보장받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대민지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인력을 확보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대민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대민지원 활동 업무 훈령(국방부훈령 제906호) 상 지원사업 선정기준 개정'
  *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 피해 복구·지원'으로 한정
- 훈령 상 대민지원 활동 시 휴가·외박, 상점 등 보상, 휴식 보장 명문화
- 훈령 상 대민지원 시 군의 참여 장병 안전, 처우 보장 등 의무 명문화

군인권공약

4

군인의 건강, 국가가 100% 책임집시다.

민간병원 진료비 100% 환급 / 민-군 협력 기반 군의료체계 효율화

군인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군과 민간의 의료시설 중 장병들이 어느 곳을 선택해도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게끔 21년 8월부터 시행 중인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80% 환급 제도를 100% 환급으로 확대하고, 늘어나는 민간병원 이용에 발맞추어 군 의료체계는 기초 진료 중심으로 개편, 상급병원 진료는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화하는 방향을 모색합시다.

-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100% 환급** (현재 80% 환급)
- **민간 위탁 진료 심의 기준 완화**
- **사단급 의무대 기초 진료 역량 강화**
- **중증 환자 등 적시 진료를 위한 지역 민간 의료시설과의 MOU 확대**
- **진료 외출 보고 절차 간소화, 진료 시 병사 단독 출타 허용**

군인권공약

5

국방의 의무를 더욱 값지게! 낡은 병영 환경을 선진화합시다.

병사 군 복무 여건 전면 혁신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는데 아직도 병영 환경은 낡고 후진적인 곳이 많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값지게 만드는 일, 병사들의 군 복무 여건을 선진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감군 및 병역제도 개편 계획과 연동하여 병사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생활관 시설 기준을 미군 등 선진국 군대 기준에 맞추어 재편하는 한편, 논란이 많았던 군 급식 조달체계를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모델로 한 공공급식조달체계로 개편해야 합니다.

- **병역제도 개편 단계적 추진** (모집병 제도 도입, 병사 복무기간 1년으로 단축 등)
- **임기 내 병사 급여 하사 1호봉 수준 (200만 원 수준) 으로 인상**
- **개인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병영생활관 표준설계기준 신규 수립** (1~2인실 도입 등)
- **침상형 노후 생활관 신속 개선 및 대책 마련**
- **지역 푸드플랜과 함께하는 군 공공급식 조달체계 구축**

군인권공약

6

군인이 대우받는 군대가 강한 군대입니다.

직업 군인 처우 개선

청운의 꿈을 안고 나라와 시민을 지키기 위해 임관한 직업 군인. 그러나 열악한 관사, 현저히 부족한 근무 지역 인프라, 현실성 없는 수당과 낮은 장기복무 선발률과 같은 직업안정성 문제 등 과도한 희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 없는 직업군인 선발 확대, 병역제도 개편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강한 군대는 안정적으로 복무하며 잘 대우 받는 군인들이 만듭니다.

- **주택수당, 당직수당, 가족수당 등 물가상승률 고려 수당 현실화**
  * 현재 당직수당 평일 기준 1만 원, 관사 미배정 군인 주택수당 월 8만 원
- **군인연금 개편**(수령 시기 공무원연금과 동일 설정)**과 계급정년 조정을 통한 20년 복무 보장**
- **중~단기 복무 간부에 대한 제대군인 혜택 확대** (10년 차 이상 → 5년 차 이상)
- **'미래 일자리' 분야 전직 지원, 교육, 제대군인 취업 연계 실시**

군인권공약

7

구시대적 여군 복무 제한은 이제 그만 –

여군 비율 확대 / 사관학교 여생도 선발 비율 제한 폐지

경찰, 교원, 공무원, 기타 공공기관 모두 여성 인력 비율을 두 자리로 늘리는 가운데, 오직 군대만 여전히 여군 비율을 한자리 수인 8.8%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직무 성격을 가진 경찰은 22년 기준 여성 인력 15% 확보가 목표고, 경찰대학교는 이미 성별 제한을 폐지했는데 군대만 구시대적인 비율 제한을 고집합니다. 유능한 여군 인재를 거부하고 내모는 군대, 이제 성평등한 군대로 탈바꿈합시다.

〈직업군인 병력 대비 여군 비율〉 (북대서양조약기구, 2019년)

- 여군 간부 비율 목표 8.8% 에서 30%로 확대 설정

* 영관장교 이상 여군 비율 우선 확대, 전방 지휘관 보직 쿼터제 검토

- 각 군 사관학교 여생도 선발 비율 제한 폐지

군인권공약

8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군대로 업그레이드!

대표군인 제도 / 군인 직장협의회 도입

20만 여명의 직업군인에게 허락된 근무 상 고충의 내부 해결 수단은 개개인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호소하는 방법 뿐입니다. 직업군인도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이 존재해야합니다. 작전 상 상명하복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권리 구제, 처우, 복지를 개선하는 일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에도 설치된 직장협의회 설립, 군대에서도 추진해야 합니다. 군인 당사자가 직접 국방부와 복무정책을 협의하는 계급별 대표군인제도도 도입합시다.

- 프랑스, 독일식 계급별 대표군인제도 도입

EX) 공군 으뜸병사 제도

- 군인 직장협의회 설치

군인권공약

9

국방부 반대로 퇴보한 개혁, 원칙대로 다시 추진 –

군인권보호관 지위 및 권한 강화 / 평시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 폐지

숱한 죽음 속에서도 국방부의 반대를 넘지 못했던 군인권보호관 설치와 평시 군사법·수사기능 폐지. 우여곡절 끝에 국방부와의 타협 속에 한참 퇴보한 누더기 입법으로 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윤 일병 어머니, 이 중사 아버지의 피맺힌 호소가 국회를 맴돌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눈물과 피로 만든 개혁 과제입니다. 원칙에 입각한 제대로 된 개혁으로 비극의 반복을 막아야 합니다.

- **군인권보호관 권한 강화** (불시부대방문조사권 부여, 국방부장관 조사거부권 폐지 등)
- **군인권보호관 전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신설**
- **평시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 폐지, 민간 이관**

군인권공약

10

나라를 위한 희생, 구분 짓고 차별할 수 없습니다.

군 복무 중 사망·상이자 원칙적 보훈 예우 / 순직, 보훈 유형 구분 폐지

2021년, 의무복무 중 사망한 장병은 기본적으로 순직을 인정하고 국가가 입증책임을 지게끔 군인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보훈입니다. 군 복무 중 사망, 상이 발생 시 원칙적으로 보훈 예우를 제공하고, 입증책임도 국가가 져야합니다. 아울러 국가를 위한 희생을 불필요하게 서열화하는 순직 유형 구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구분을 통합합시다.

- 군 복무 중 사망, 상이 발생 시 원칙적 보훈 예우 제공, 입증책임 국가 전환
- 「군인사법」 상 순직유형 구분 (1, 2, 3형) 통합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제도 통합